‘强대强’… 개성공단 등 대북경협 ‘올스톱’?

6자회담 매개 대화재개 가능성도

■ 남북관계 파국맞나

남북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20일 공식 발표되면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후속 조치로 전방위 대북제재를 예고하고 있고, 결백을 주장해온 북측이 강하게 맞대응을 할 가능성이 커 남북관계의 파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치킨게임’ 대결, 남북관계 예측불허**=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남북관계는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정면으로 질주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는 다음주 초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시작으로 대북 제재 조치를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기존대로 결백 주장을 되풀이하며 ‘강대강’ 맞대응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당장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이날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직후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며 남측에 국방위 검열단 파견과 함께 제재 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면전쟁’이라는 극한 용어까지 사용했다. 북측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 개성공단 통행 차단을 비롯해 미사일 발사, 추가 핵실험, 군사동원태세 발동, 화력시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도발, 기존 남북간 각종 합의 파기 등으로 맞대응하며 긴장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남북관계가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지면서 그동안 남북교류의 유일한 ‘허파’ 역할을 해왔던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고, 우발적인 남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정부들어 남북관계 급랭 속에서도 정상회담 물밑논의 등으로 대화를 모색하던 남북관계가 전면적인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간 대화 및 교류재개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평화문제연구소 장용석 연구실장은 “정부의 대북 조치와 북측의 대응으로 남북관계는 ‘폭발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대화재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남북관계 악화로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6자회담이 대화재개 ‘매개’ 될 수도**=대결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외부변수’인 6자회담에 의해 다소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우리측의 발표에 대해 북측이 결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남북 당국의 자체 의지에 따른 대화 재개는 상당기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은 6자회담 조속 재개를 원하고 있고, 미국 측도 현재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한미 공조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6자회담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천안함 침몰사태 파장이 다소 가라앉고, 6자회담 당사국을 중심으로 회담 재개 필요성이 힘을 얻으면 남북이 6자회담을 매개로 불편한 관계속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천안함 조사결과가 발표되던 20일 오전, 속초항으로 입항한 2척의 북한 선박에서 선원들이 하역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북 행위 용납못해… 고립만 심화”
中 “천안함 조사결과 평가작업 진행”
日 “한국, 유엔 이사회 제기땐 지지”

■ 각국 반응

◇ **미국**=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20일 발표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백악관은 이날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뢰에 의해 3월 26일 침몰된 한국의 천안함 승조원 46명의 희생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면서 “미국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침략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condemn)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국제조사단에 의해 오늘 발표된 보고서는 증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반영한다”면서 “이(조사결과)는 북한이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너무도 강력히(overwhelmingly)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어 “이번 공격은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와 국제법 위반의 또 하나의 예”라면서 “이번 공격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 **중국**=중국은 그동안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신중한 자세 견지,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주문해왔으며 지난 18일 장신썬 주한중국대사를 통해 조사결과를 공식 통보받고도 아직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현재 우리 정부가 제공한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은 우선 우리측이 제공한 증거가 ‘천안함이 북한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측에 사실 확인 요청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중국 측은 증거 확인 조사를 통해 일단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후 내부 입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측의 꼼꼼한 업무 스타일로 볼 때 며칠내에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증거 조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여러가지를 따져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일본**=일본 정부는 북한의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과 관련,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지지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제민관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런 의사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발표와 관련,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주재로 이날 관계각료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뒤흔들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를 염두에 두고 한국·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향후 미국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美 해군 7함대 서해 전진 배치 조율

대북 경제제재 유엔안보리 회부 등 방안 협의

■ 한미 대북조치 내용은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한·미 양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천안함 사태의 공동 대응 방안 등을 상세히 논의한 데 이어 김태영 국방장관도 금명간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가능한 대북 조치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3국 순방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오는 26일 방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열고 천안함 사건의 후속 대응조치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을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미 양국이 선택할 군사적, 외교적 차원의 ‘천안함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천안함 침몰에 상응하는 ‘외과수술적 폭격(surgical strike)’과 같은 군사적 보복 조치는 무력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를 앞둔 한국 입장에서 현실적인 옵션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 훈련 및 경계 태세 강화 방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 한·미 양국은 이미 미 해군 제7함대 일부 병력을 서해 또는 동해에 전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1차적인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서해상에서 한미 연합 대잠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하는 방안과 함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서해상 대북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일각에서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정밀폭격 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 이지스함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서해에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1976년 8월 미군 장교 2명이 숨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F-111 전투기 20대와 항공모함이 동해로 북상해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 전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긴밀한 공조 및 양자 차원에서 가능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이미 천안함 침몰 사건을 안보리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미 공조를 통해 한국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교류협력을 중단하고 미국은 현재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CCTV 11개중 6개 복원했다 유가족 고려 공개 여부 신중”

민·군 합동조사단

민·군 합동조사단은 20일 천안함에 설치된 11개의 폐쇄회로(CC)TV 중 6개의 녹화 화면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합조단 윤종성 과학수사분과팀장은 이날 국방부 대회실에서 가진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CCTV가 약 1개월 정도 해수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복원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여러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복원했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천안함에는 총 11개의 CCTV가 있지만 이 가운데 6개가 복원됐다. 안타깝게도 폭발 1분 전까지 복원이 되어 있었다”며 “정전 1분 후에 녹화되도록 사전에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원된 모습은 안전 순찰하는 모습, 가스터빈과 기관실이 안전한 모습, 후타실에서 운동하는 모습”이라면서 “CCTV를 통해 정상적인 임무 수행 중에 갑작스런 폭발로 인해 침몰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유가족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윤 팀장은 덧붙였다.

이에 박정이 합조단 공동단장은 “일부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유가족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추후로 비공개로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